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17호

[체육시민연대 성명서]

건강을 우선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초등학교 신체활동 강화 결정을 환영한다!

2024.04.30

한국체육학회와 16개 협력 학회...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 분리 결정에 지지

한국체육학회, “초등 1,2학년 체육 단독교과 편성” 지지 선언

김세훈 스포츠경향기자

엘리트 선수만이 아닌 모든 일반 학생이 학교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어야...

'성적지상주의' 韓엘리트 체육 한계 봉착... '저변 넓히고 인재 키워야'

이석무 이데일리기자

함께 운동할까요? 배리어프리(무장애)스포츠

'모두를 위한 스포츠', 체육단체의 정관·규칙·반칙조항 개정 필요

김최환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래리 나사르 사건...우리나라의 경우는?

美 흥든 체조 선수 성폭력 '합의금 1,900억...전체 소송 금액 1조'

최가영 YTN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건강을 우선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초등학교 신체활동 강화 결정을 환영한다!

체육시민연대는 한국 사회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운동 습관 형성의 난맥상을 개선하기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의 '즐거운 생활' 교과에서 체육을 분리하기로 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다만 이번 결정에 있어서 현장의 우려도 존재하는바 추후의 조치들에 대해 교육부의 성실한 의견수렴과 관련 시행조치도 함께 촉구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한국 사회의 체육 정책은 국가 주도의 엘리트 스포츠 일변도로 정리할 수 있다. 정책 중심에 자리하는 학생선수의 경기력 강화 이면에 일반 학생의 체력 하향화로 대변되는 양극화 현상이 대두된다. 이러한 맥락과 더불어 심각한 저출생, 입시 위주의 교육 분위기, 디지털을 활용한 여가활동의 성행뿐만 아니라 학습권 포기를 강요하는 스포츠 진입 장벽의 존재 등이 더해져 학원 스포츠 저변의 붕괴 및 청소년 건강 위협이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청소년의 신체활동 참여는 국내·외 지표를 통해 모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으며, 이는 즉각적이고, 총체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결정한 초등 1~2학년의 신체활동 관련 교과 신설 등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은 유치원 누리교육과정과 초등학교 3, 4학년 체육과 교육과정의 공백을 메워주고, 지속적인 신체활동 습관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되어 환영한다.

교육부는 결정 후의 시행조치들에 대해 성실히 임하라!

다만 교육부가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부족의 심각성과 그 개선 방향의 시급함에 방점을 찍고, 안건 심의를 시급히 추진한바, 국교위의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일부의 우려가 있었고, 그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이번 결정 이후의 조치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보다 깊이 청취하고, 합리성을 갖춘 모습으로 그 내용을 채워나가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면 늘어난 신체활동 시간과 체육교과를 지도할 인력의 경우, '과거 땀질 처방', 체육인들 일자리 확보 등 현장의 비아냥을 들었던 스포츠강사 제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며, 양질의 체육수업을 담보하고, 1-2학년 담임교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체육전담교사' 제도의 도입과 정착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부모 민원 발생을 안고 살아가는 현장교사들에게 있어서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부족한 공간으로 인해 체육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사들이 많다는 점을 상기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확보와 활용 방안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다.

최종 시행과정까지 정치 논리 퇴출하라!

특히 이번 분리조치는 음악, 미술로 대변되는 예술과 체육의 대립 관계가 아닌 체육교과 분리의 당위성에 의한 별도의 조치임을 인식하고, 이를 방해하려는 부당한 논리에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과거부터 '예체능'이라는 이름으로 예술과 체육을 묶은 이후 상황에 따라 이 둘을 합치거나 떼어놓으며,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쳐 왔다. 학원법에서는 예체능이 아닌 '예능'으로 국한하여 인권위의 권고까지 불수용해가며, 체육을 떼어놓았고, 교과목에서는 '예체능'으로 묶어 서로 이질적인 부분조차도 하나로 묶어 관리해왔다. 이런 관행들은 예술과 체육이 마치 동일한 대우 아래 놓여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만들어 정책적인 판단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이번 결정이 학생 신체활동 강화라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사안인 만큼 여야의 관계에 놓인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없고, 각 교과들 간의 경쟁적 영역 확보의 대상도 아니며, 국가적 청소년 건강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임을 인식하고, 그 취지를 끝까지 견지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해 체육을 관장하는 정부 기관과 단체들도 유소년들이 보다 자유롭고, 체계적인 가운데 체육, 스포츠를 배우고, 평생 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4월 30일

체육시민연대

한국체육학회, “초등 1,2학년 체육 단독교과 편성” 지지 선언

한국체육학회(회장 이한경)와 16개 협력 학회들이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 분리 결정에 지지를 표명했다.

체육학회는 지난 28일 ‘초등학교 1,2학년 체육교과 독립으로 아이들 운동습관 길러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체육교과를 ‘즐거운 생활’ 통합 교과에서 분리하기로 한 결정은 초등학생의 운동습관을 만들어 성장기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학회는 “체육계는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비만율이 2017년 10명 중 1명에서 2021년에는 5명 중 1명으로 지난 5년간 크게 증가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국가 차원에서 비만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그것이 공교육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해왔다”며 “지난 40년간 체육이 음악과 미술이 함께 통합된 ‘즐거운 생활’ 교과에 포함되어 있어 체육을 학습시킬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였기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체육 교과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학회는 이어 “교육부가 체육을 ‘즐거운 생활’에서 분리하여 신체활동과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한 ‘건강과 안전’(가칭) 교과목을 신설할 것으로 발표하자, 체육계는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 스포츠에 대한 흥미와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환영하고 있다”며 “또한, 모든 학생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변화가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잘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경 한국체육학회장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교육과정의 개편을 넘어서, 국민의 건강 향상과 스포츠 문화의 저변확대를 이끌 것”이라며 “이번 교과 분리 결정이 학교 체육의 질을 높이고 모든 학생이 스포츠의 즐거움을 발견하여 평생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매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체육학회는 1953년 체육지도자 양성기관에 있는 교수진을 중심으로 창립됐다. 한국체육학회 산하에는 한국체육사학회, 한국체육철학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한국스포츠심리학회, 한국스포츠교육학회,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한국사회체육학회,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한국무용학회, 한국운동생리학회, 한국운동역학회,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 한국특수체육학회, 한국운동영양학회, 한국발육발달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 등 16개 협력 학회들이 있다. 체육대학이 있는 전국 거의 모든 대학 교수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적지상주의' 韓엘리트 체육 한계 봉착... "저변 넓히고 인재 키워야"



“인도네시아전 충격패는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가 붕괴했음을 알리는 신호다”

황선홍 감독 이끈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에 패한 뒤 일본 언론 '닛칸스포츠'가 전한 내용이다.

조별리그에서 한국에 패한 일본 언론의 이런 지적은 난센스다. 그럼에도 냉정하게 바라볼 때 절대 틀린 말이 아니라는 점이 가슴을 더 아프게 한다.

닛칸 스포츠는 “이번 올림픽 예선에서 한국의 구기 종목은 참패를 당했다”며 “남자는 전멸했고 여자 핸드볼만 유일하게 11회 연속 올림픽에 나간다”고 전했다. 이어 “파리 올림픽에 나서는 한국 선수단 총규모는 200명도 안 되는 170~180명 수준이다”며 “한국 엘리트 체육이 붕괴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 체육계가 후퇴하는 이유는 엘리트 스포츠에 인재 유입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며 “한때 한국이 자랑했던 유도, 복싱, 레슬링도 이제 국제 경쟁력이 없다”고 혹평했다.

올림픽 선수단 규모를 비교해도 한국 스포츠의 퇴보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선수 50명을 파견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 양정모가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국제 스포츠 무대에 존재감을 알렸다.

이어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선 선수 210명이 출전해 금메달 6개, 종합 10위에 오르면서 스포츠 신흥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1988년 서울 대회에는 무려 477명의 선수가 참가했고 개최국 이점을 살려 금메달 12개, 종합 4위라는 역대급 성과를 거뒀다.

이후에도 한국은 하계 올림픽에 꾸준히 200~300명대 선수단을 파견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는 204명, 바로 직전은 도쿄올림픽에선 232명이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200명을 채우기 어렵다. 최대치로 잡아도 170명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출전 선수 수가 많은 단체 구기 종목의 부진이 결정타가 됐다. 파리 올림픽에서 열리는 단체 구기 종목 7개 가운데 한국이 본선행 티켓을 따낸 것은 여자 핸드볼이 유일하다. 도쿄에서 4강 신화를 썼던 여자배구도 '에이스' 김연경이 대표팀을 떠난 이후 전력이 급추락해 올림픽 본선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최대 13개까지 수확했던 올림픽 금메달은 지난 도쿄 대회에서 6개로 줄었다. 40년 전 1984년 LA 올림픽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나마 '효자종목' 양궁에서 금메달 4개를 휩쓸 덕분에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파리올림픽의 전망은 흐리다 못해 암울하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에서 “금메달 5개로 종합 순위 15위권 정도를 예상한다”면서도 “경우에 따라선 20위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올림픽 목표와 순위를 보면서 우리나라 체육의 자리가 좁아지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걱정을 숨기지 못했다.

다음 장 계속

체육계에선 당장 파리 올림픽 이후가 더 걱정된다고 말한다. 한국 스포츠가 더 추락하지 않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대책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기존의 엘리트 체육 시스템으로는 더는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기정사실이 됐다. 엘리트 체육은 '국위선양'이라고 쓰고 '성적지상주의'라 읽는다. 1980년대 이후 한국 스포츠가 국제무대에서 급성장하는 원동력이 됐지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본격화된 데다 스포츠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더이상 예전 방식의 엘리트 체육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가까운 일본이 한국의 좋은 모범사례다. 일본은 한국이 걸어온 길을 20~30년 전에 먼저 밟았다.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16개를 획득, 종합 3위에 올랐다.

이후 '엘리트 체육'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시들고 '생활체육' 확대가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떠올랐다. 자연스럽게 올림픽 성적은 추락했다.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와 1996년 애틀랜타 대회에선 금메달 3개에 그쳤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엘리트 체육 육성에 다시 나섰다. 다만 그 방식은 한국과 달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1년 8월 스포츠 기본법을 제정한 뒤 5년 단위로 스포츠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단순히 올림픽 메달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스포츠 참가 인구를 최대한 확대하고 그에 맞는 인재 및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성인스포츠 실시율을 주 1회 이상 65%, 주 3회 이상 30%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학교에선 '1인 1기'를 통해 모든 학생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스포츠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인구 감소는 한국과 일본의 공통된 고민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체육계에 좋은 인재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스포츠를 접하는 저변 자체는 오히려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재일교포인 최윤 대한럭비협회 회장은 어린 시절 일본에서 럭비 선수로 활동했다. 엘리트 선수로서 발돋움하진 못했지만 어릴 적 몸에 밴 럭비 정신은 사업가로 성공하는데 훌륭한 밑거름이 됐다.

최윤 회장은 "한국은 지금 학교 스포츠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진정한 학교 스포츠가 되기 위해선 엘리트 선수만이 아닌 모든 일반 학생이 학교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하는 문화가 먼저 만들어진 뒤 그 안에서 재능있는 선수를 발굴해야 한다"며 "모든 스포츠 선진국이 그렇게 훌륭한 선수를 키운다. 우리만 기형적인 시스템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선홍 U-23 축구대표팀 감독은 귀국 인터뷰에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대표팀 운영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는 "연령별 대표팀은 4년 주기로 가야 한다"며 "아시안게임 성적에 따라 사령탑의 운명이 좌우되면 아시안게임에만 집중하게 돼 올림픽 준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계획보다 눈앞에 놓인 성적에 집착하는 대한축구협회에 던진 쓴소리다. 이는 단지 축구계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 체육단체의 정관·규칙·반칙조항 개정 필요

스포츠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로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든 접할 수 있도록 스포츠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집 주변에서 쉽게 스포츠를 접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복지 혜택을 통해 체육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스포츠 3법의 시행은 앞으로 변화하는 스포츠 환경에서 우리 스포츠가 나아갈 방향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란 장애인, 고령자들도 누구나 차별이나 배제 없이 생활 스포츠 종목에 참가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스포츠 기본법 제3조 정의에 따르면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하며, 제4항에서는 “장애인스포츠”란 장애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생활 스포츠와 전문 스포츠를 포함)을 말하고 있다.

스포츠 기본법의 목적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 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법 제2조는 기본이념으로 모든 국민이 스포츠 및 신체 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의 가치가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스포츠의 다양성·자율성과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라 선언하고 있다.

스포츠를 인간의 기본권이 실현되는 장이며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문화적 욕망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장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럴 때 스포츠 기본권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권, 건강권, 노동권 등과 동등한 수준에서 결합이 되어 심도가 깊은 내면과 포괄적인 외연을 갖게 된다. 이 모든 권리와 스포츠 권이 결합 되어야 이른바 ‘체육인’들의 사회적 위상, 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도 연결된다.

스포츠 3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등 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국제 경기대회 지원법, 스포츠산업진흥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등과 함께 스포츠 법제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스포츠 기본법만 제정한다고 스포츠 법제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 중에 장애인, 고령자, 사회적 약자 등이 참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생활 스포츠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각 체육단체의 정관이나 규칙, 반칙조항 개정이 필요한 시기다.

지난 2024년 4월 3일 에이블뉴스에 “동호회 장애인 구성비율 제한 규정 ‘차별’·파크골프협회 권고수용 삭제” 제하의 기사가 보도됐다.

다음 장 계속

그 내용을 인용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J시 파크골프 협회가 동호회 등록 시 '장애인의 구성 비율 제한 규정'에 대한 시정 권고를 수용, 삭제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3월경 장애인 8명과 비장애인 5명의 동호회를 결성해 J시 파크골프 협회에 가입신청을 문의했는데 동호회가 등록 기준인 장애인 40% 미만, 비장애인 60%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가입을 불허하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차별'이라고 판단해 J시 파크골프 협회장에게 등록 기준 규정 개정, J시장과 J시 체육회장에게 생활체육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J시 파크골프 협회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동호회 구성 비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고,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수강했다고 회신해 왔다.

J시는 체육회 회원 종목단체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J시체육회와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 추진을 알려 왔다.

J시 체육회도 ▲회원 종목단체의 장애인 동호인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차별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차별행위가 발생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 ▲회원 종목단체와 적극 소통, 장애인 차별행위 예방 ▲회원 종목단체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회신해 왔다.

인권위는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향후 생활체육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일련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스포츠 종목단체나 지도자들이 '모두를 위한 스포츠 기본법'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종목단체 정관이나 규정 등을 재. 개정하지 않은 채 예전에 사용하던 대로 적용하다가 생활체육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들어내는 것이다.

필자도 스포츠 활동 현장에서 종종 장애인 선수가 경기에 출전했다가 반칙을 범한다든지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장애인은 장애인 대회나 나가야지 이곳에 왜 왔어' 야단치는 심판도 있고 장애인 선수에 대한 배려나 편의 제공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많다, 더군다나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는 다소 불리한 규칙이나 반칙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따라 반칙을 선고하고 선수의 출전을 제한 할 때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기본법에서 "장애인스포츠"란 장애인이 참여하는 모든 스포츠 활동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생활 스포츠와 전문 스포츠를 포함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는 장애인이라도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 할 권리를 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배리어프리 스포츠 활동으로 소통과 화합의 스포츠 사회를 조성해 가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이 참여하는 생활 스포츠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각 스포츠 종목단체의 정관이나 경기 규칙, 반칙조항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의 스포츠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함께 운동하는 스포츠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포츠 활동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운동장, 용품, 규칙)을 개선하고 배려해 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어 함께 운동하며 비장애인들과도 어울리고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의 배리어 프리 스포츠를 함께 즐기고 건강을 지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美 혼든 체조 선수 성폭력 합의금 1,900억... 전체 소송 금액 1조

미국 체조팀 주치의 래리 나사르(60)의 성범죄에 능장 대응한 미 법무부가 피해자에 총 1억 달러(우리나라 돈으로 1,900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타임스 CNN 방송 등 미언론은 일제히 래리 나사르의 성폭력 사건에서 능장 수사를 한 연방수사국(FBI)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1억 3,870만 달러(우리나라 돈으로 1,909억 원)를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1986년부터 체조 대표팀 주치의로 일했던 나사르는 수십 년에 걸쳐 여성 선수들에게 치료를 빙자해 상습 성범죄를 저질렀다. 30년 동안 265명을 성적으로 학대해 온 래리 나사르는 2018년 유죄 판결을 받고 17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나사르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한 FBI도 책임을 면하지 못 했다. 나사르의 범죄는 2015년에 이미 신고가 들어온 상태였으나 나사르가 법정에서 서기까지 약 3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FBI는 2015년 7월 신고를 받고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뷰까지 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2021년 9월 열린 미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마로니는 "성범죄 피해 사실을 FBI 요원에게 진술하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FBI가 진술을 무시한 것이 더 큰 고통이었다"고 증언했다. 마로니는 수사 초기인 2015년 이미 FBI에 피해 진술을 했지만, FBI 요원은 2017년까지도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나사르 사건은 수사 기관이 능장 대응을 하는 사이 언론에서 먼저 다뤘다. 전직 체조 선수였던 레이철 덴홀랜더 변호사가 2016년 9월 일간지 '인디애나폴리스 스타'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급물살을 탄 것이다.

래리 나사르의 성폭력 생존자(그들은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로 불리길 원했다) 목록엔 간판스타 시몬 바일스, 알리 레이먼스, 매카일라 마로니와 매기 니콜스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선수들이 포함됐다.

이들 선수는 FBI에 2022년 각각 5,000만 달러(우리나라 돈으로 약 628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나머지 참여자들도 1,000만 달러(약 125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CNN에 따르면, 법무부는 FBI 인디애나폴리스 사무소의 고위 관리들이 나사르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았고, 대응할 때 수많은 근본적인 실수를 저질렀으며, 조사 활동을 수행할 때 여러 FBI 정책을 위반했다는 감찰 보고서의 내용을 인정했다.

피해자 44명을 대리한 믹 그루얼 변호사는 나사르 관련 소송의 전체 합의금이 10억 달러(약 1조 3,76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천문학적인 소송 액수가 아니라 그만큼 끔찍했던 피해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스포츠계의 전무후무한 사건'이자 '미투' 열풍을 불렀던 나사르의 성폭력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우리는 영원히 어리지 않다'에 자세히 소개됐다. 증인으로 법정에서 출석했던 피해자 카일 스티븐스가 나사르를 바라보며 "어린 여자아이들은 영원히 어리지 않다. 강력한 여성으로 변해 당신의 세계를 박살 내려 돌아온다"고 한 말은 그대로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됐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2018년은 우리나라도 '미투의 해'였다. 조재범 전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의 성폭력 의혹으로 촉발된 체육계 성폭력 해결을 위해 2019년 2월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특별인권조사단(스포츠특조단)'이 꾸려졌다. 2020년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해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 사건을 저부하고 처리 후 해당 체육단체에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2019년 출범했던 스포츠특조단은 지난해 3월 말 조직을 해산했다. 행정안전부가 스포츠특조단의 파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25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행안부는 "원래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조직이었고, 업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필요하면 인권위가 정규 업무로 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한겨레신문에 "각 부처가 한 곳에 모여 정책·조사·교육을 할 수 있는 특조단이 체육계 인권을 다루는 올바른 방식이었다고 봤는데 지금 정부에선 이를 상시 조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특조단은 지난해 3월 16일 기계체조 선수의 훈련 체계 개선 등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을 마지막으로 공식 해산했다.

2020년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는 2023년 10월 기준 출범 이후 징계를 요청한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처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김동현 사무관은 YTN 라디오에 "지난 3년간 징계 요구건 224건 중 체육단체의 징계 결과 통보 건은 99건이었고 이 중 9건은 결과 통보까지 1~2년이나 걸리도록 상당히 늦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2021년 요구건 중 6건, 2022년 요구건 중 26건은 징계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징계 원인으로는 '강제력 부족'이 원인이다. 기한이 정해지지 않으니 재조사 명목으로 처리를 미루거나, 징계 요청을 따르지 않아도 법적 처벌이 없다 보니 효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중 징계 요구 결과는 3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돼 오는 8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단체에서 징계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조항은 없다.

중앙대 체육과학대 김상범 교수는 미국 체조 선수들의 소송에 대해 "미국과 우리나라는 개인의 권리나 권한이 침해당했을 때 배상해 주는 액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서 "단지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판결을 내는 배경에는 (이러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한몫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백호기 응원서 인권침해" 주장 학생 '자퇴'... "제보 후 따돌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2443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대표 발의

<https://tk.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26/2024042600008.html>

장애인체육인 인권상담실, 도민체육대회 기간 '찾아가는 인권상담실' 운영

<https://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517>

"잃어버린 12년" 런던 세계 톱5→파리 1976년 이후 최소 선수단...메달 없어도 된다면 韓스포츠의 붕괴

<https://sports.chosun.com/sports-news/2024-04-28/202404280100215730028854?t=n1>

스포츠윤리센터, 페퍼저축은행 배구단 대상 윤리 교육 실시

<https://www.news1.kr/articles/5397116>

성남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 청렴교육 실시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91174>

"프로감독 도전했으나 고배...여자를 써보기는 했냐고 따졌죠"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4192140229950708>

대한럭비협회, '새로운 100년 이끌 주인공' 국내 15세 이하 선수 대상 럭비 드림캠프 진행

<https://www.osen.co.kr/article/G1112322051>

사우디와 더 밀착하는 FIFA...국영석유회사 아람코와 후원 계약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6056000007?input=1195m>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